헬스케어타운 내 '차병원' 설립 난항

한해 도민 2000여명 난임치료 위해 대도시行
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 미온적
"저출산 해결·지역사회 발전 위해 유치 절실"

제주에서 연 2000여명에 달하는 도민들이 난임치료를 위해 대도시 전문병원을 찾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지만 난임부부들의 시간·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난임치료를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동안 부산과 대구, 광주, 서울 등을 방문했던 50대 A씨 부부는 총 1억원이 들었다. 이들 부부는 늘 "1억원짜리 아들"이라고 자랑한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난해부터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난임치료 전문기관인 차병원 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이 발목을 잡고 있다.

JDC는 지난해 9월 차병원·바이오 그룹 본사인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차병원·바이오 그룹과 헬스케어타운 내 난임 전문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난임 전문 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나 최근 복병을 만났다. 제주자치도의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에 의료법인 설립시 충분한 대지와 건물(임차불가)을 확보하고 의료기관별 시설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차병원이 헬스케어타운 내 건물을 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헬스케어타운 내 토지 매입도 불가능하다. 유원지인 경우 2017년 대법원 판결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JDC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 허용(최소 10년이상)'과 '의료법인의 난임치료 전문 산부인과 의원 임차 허용'을 제주자치도에 공식 요구했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지사 재임 당시에는 지침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에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침 개정시 악용소지가 있어 당장은 개선하기가 힘들고, 도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의료법인 임차 출연 허용'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일률적으로 임차출연을 금지하는 것 역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법인의 임차 출연 허용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시설 기준 등의 준수사항, 의료기관의 공정성·안전성·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문대림 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이재명 제주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합류

문대림(사진)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25일 이재명 제주선거대책위원회(이하 이재명 제주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재명 제주선대위는 이날 문대림 전 이사장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문대림 전 이사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겠다며 JDC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퇴임식을 갖고 JDC 이사장 직에서 정식 퇴임했다.

문대림 상임선대위원장은 "제주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힘을 보태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오직 대선승리와 4기 민주정부수립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해저터널 발언 이재명 사과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 논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주와 서울을 잇는 KTX 고속철도(제주 해저터널)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5일 "도민들 의견과 여론을 무시한 채 표만을 의식한 발언"이라며 도민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 후보의 제주 해저터널 발언에 대해 "제주도민을 전적으로 무시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도민들은 섬 정체성을 파괴하는 제주해저터널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대 의견을 제시해왔다"며 "섬 정체성은 제주도민의 정체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제주해저터널 관련 의사결정은 도민의 주권적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기자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대선 올인"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개별 운동 금지 지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출마 후보 예정자들에게 당분간 개별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대선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대선이 끝날 때까지 개별 선거운동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의힘 도당은 이런 지시가 '대선에 집중하라'는 중앙당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대선 때까지 예비후보자격의 문자발송과 명함 배부와 사무실 개인 현수막 걸기 등도 금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집중하기 위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3·9 대선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상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제주지역교육격차해소위원회가 25일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 갔다.

민주당 선대위 제주교육격차해소위 출범

제주지역총괄위원장에 강성민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제주지역교육격차해소위원회가 25일 출범했다.

제주지역교육격차해소위원회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출범식을 열고 "대선 승리를 통해 교육격차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민주당 중앙당 선대위 산하 교육격차해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회재 국회의원과, 위계점 공동상임위원장, 김민태 공동위원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제주지역교육격차해소위원회는 제주지역총괄위원장으로 임명된 강성민 제주도의회의원을 필두로 운영된다.

강 위원장은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가 하위 20%의 8배에 달한다"며 "제주에서부터 부모세대의 교육격차가 가구의 소득격차로, 그 소득격차가 다시 자녀세대의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고의숙 남광초 교감
25일 교육의원 출마 선언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 논란 속에 고의숙(사진) 남광초 교감이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 출마를 첫 공식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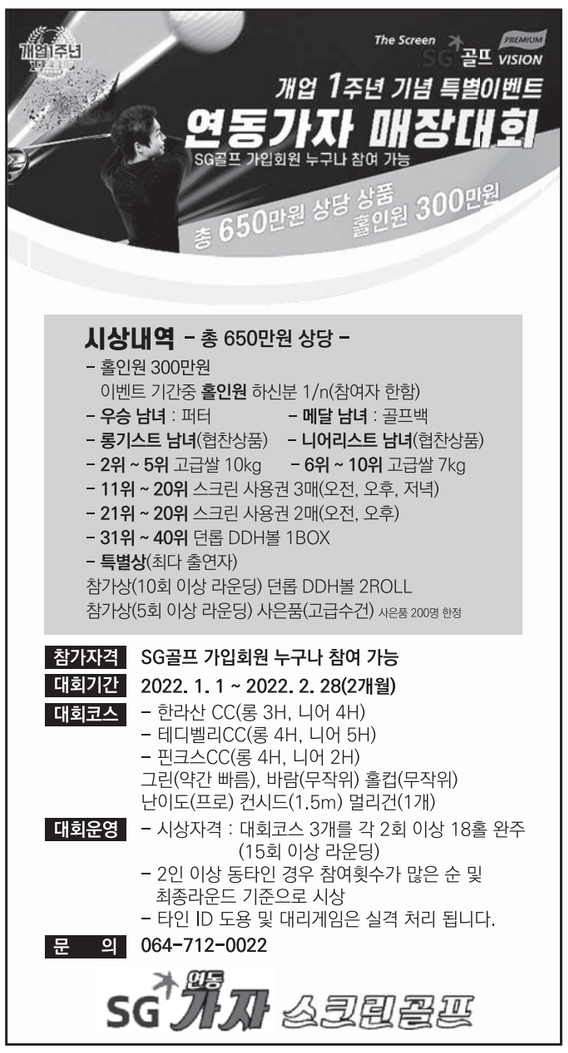
고 교감은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과 그 제도 운영에 대한 도민의 아픈 질책과 아이들을 위한 교육전환의 절박함 속에서 정년을 10년 가까이 남겨두고 새로운 교육자치 시대를 여는 도민의 일꾼이 되고자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고 교감은 제주시 중부 선거구에 출마한다.

고 교감은 이날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제주의 '교육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지위를 후퇴시키는 법안"이라고도 비판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고용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오영훈 의원 "지방학교 출신이라고 차별 없어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사진)은 25일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고용에서 특정인을 우대·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는 내용의 '고용에서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사용자가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 배치·전보·승진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담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학력 등 차별 시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규정하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학력 등을 차별하지 않은, 모범이 되는 사용자를 선정해 우대하는 규정 등도 담았다.

오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와 학벌에 따른 고질적 병폐가 타파되지 않는 한 공정한 사회가 실현되기 어렵다"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방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부미현기자